

KINU Insight

2022
No.1

김정은 시대의 북한: 10년 평가와 2022년도 전망

홍제환
박형중
박영자
김진하
정은미

김정은 시대의 북한: 10년 평가와 2022년도 전망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형중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 참여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 례

I. 서론	1
II. 정치	3
1. 10년 평가	3
2. 2022년도 전망	9
III. 외교	12
1. 10년 평가	12
2. 2022년도 전망	17
IV. 경제	20
1. 10년 평가	20
2. 2022년도 전망	26
V. 사회	29
1. 10년 평가	29
2. 2022년도 전망	34
VI. 결론	37
1. 10년 평가	37
2. 2022년도 전망	39

차 례

표 차례

〈표 V-1〉 김정은 정권의 국가예산 중 인민적 시책비 & 사회문화 시책비 비중 추이	30
〈표 V-2〉 김정은 정권의 사회복지 중 부문별 국가예산 지출계획 증가율(%) 추이	31

I 서론

홍제환

- 김정은 집권 이후 10년이 경과되었으며, 그 사이 북한은 정치, 군사, 대외관계, 경제, 사회 등 제방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음.
 - 정치적으로는 김정은 중심의 권력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핵무장국 기정사실화를 추구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룸.
 - 경제적으로는 김정은 집권 초기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다가 제재 강화 및 코로나19로 인해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
- 이러한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김정은 시대 북한에 대한 이해 수준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은 정권은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김정은 집권 이후 10년간 나타난 북한의 변화상을 이해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부문으로 나누어 김정은 시대 10년을 평가함.¹⁾
 - 정치 부문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권력 안정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김정은식 독자 수령 권력 체계 구축 과정 및 엘리트 재편에 초점을 맞추어 논리
 - 외교 부문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장국 기정사실화를 추진하면서 사활적 이익을 걸고 북핵 및 대미외교에 집중해 온 만큼, 대외정책 패턴을 북핵 외교와 미·북 관계 전개 양상에 초점을 맞춰 분석

1) 김정은 시대 10년에 대한 평가는 오경섭 외,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서울: 통일연구원, 2021), 김진하 외,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21), 홍제환 외,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서울: 통일연구원, 2021), 정은미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21)에서 상세히 이루어졌으며, 이 글에서는 이 중 핵심 내용을 요약·소개함.

- 경제 부문은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 생활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제재 강화 이전과 이후 대비되는 북한경제의 변화상을 분석하는 데에 주력
 - 사회 부문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변동 양상과 그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책적 대응을 사회복지와 사회통제라는 두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
- 아울러 김정은 정권 10년에 대한 평가, 북한이 2021년 말 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통해 제시한 2022년도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2022년도 북한정세를 분석하고 전망
-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II 정치

박형중·박영자

1. 10년 평가

1) 후계자 내정시기의 북한 정치 (2009~2011년)

□ 권력 구성 원칙의 변화

- 김정은은 2009년 1월경 후계자로 내정되었으며, 이후 권력 세습을 위한 권력 재편이 진행됨.
 - 2009~2011년의 시기는 과도기적 이중권력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한편에서 김정일 권력 체계의 기본 원칙인 선군체제가 유지되고 또한 김정일 시기의 주요 인물과 기관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가운데, 그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김정은 권력 체계가 점진적으로 구축되어 갔음.
- 김정은 후계 체제 진행 과정에서 이미 김정일 시기와는 다른 권력 구성 원칙이 설정되고 그에 부합하게 새로운 중추 세력이 세력을 확대했음.
 - 김정일 권력 체계는 선군원칙을 토대로 했으며, 국방위원회를 국정의 중추로 한 것을 토대로 군부의 기관적 인물적 이해관계가 우세를 누리던 체계였음.
 - 이와 달리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은 선당 원칙을 관철하는 것을 지향하면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부터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이 현격히 상승하는 등 중앙당 체계의 복구가 진행되었음.
 - 3차 당대표자회를 거치면서 김정은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가안전보위 부장으로서 첫 직무를 시작하였는데, 김정은의 두 개의 첫 직책은 김정은 시대의 권력 중추 기관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시사하는 것이었음.

□ 대내외 환경 및 국정 노선의 변화

- 김정일의 선군체제는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가장 취약했던 시기를 관리하던 국정체계였음.
 - 선군체제는 김일성 사망 다음 해인 1995년 출범했다고 볼 수 있고 1998년에 구체적 진용과 정책 방향을 갖추었음.
 - 선군체제는 1994년 제네바 합의, 2000~2007년간 남북 간 타협/협력 노선을 중추로 대남·대미 타협노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압박을 경감하고 대외원조를 수용하며, 내부적으로는 시장확대에 편승하고 관리하는 국정노선을 취했음.
 - 이러한 국정노선은 북한이 1990년대 중반 가장 엄중한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면서, 내부 체제를 재정비하고 대외적으로 군사적 외교적 균형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음.
- 2009~2011년 사이 권력 세습 진행의 시기는 북한의 대내외 환경이 심대하게 악화하는 시기와 일치하였음.
 - 이 시기의 후계 체제 구축 사업은 대내외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정노선과 국정체계의 수립과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여 진행되었음.
 - 북한은 2009년부터 대남 강경노선, 비핵화회담 거부 및 핵보유 의지 과시, 시장 억압 강도 강화 등 대내외 강경노선을 채택했음.

2) 김정은 정권의 국정체계와 국정노선의 기본 특징

- 2012년 4월 공식 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후계 권력 시기(2009~2011년)의 이중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김정은식 독자 수령 권력 체계를 구축해야 했음.
 - 이는 세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추진되었음.

□ 선군에서 선당으로 정권 운영 조직원칙의 변경

- 정권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의 원칙을 선군에서 선당으로 변경하며, 이에 부합하게 국방위원회를

국정 중추로 삼는 기관체계를 폐지하고 중앙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체계를 수립했음.

- 이에 따라 당정치국, 당중앙위 전문부서, 당중앙군사위원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리고 2016년 7차 당대회 이후에는 국무위원회와 내각이 국가의 정치와 행정의 중추로 등장하였음.

□ 기관/인물들 간의 권세 및 이권 관계의 재조정

- 선군에서 선당으로의 정권 조직원칙의 변화는 정권 운영 기관 체계의 재편뿐 아니라 김정은 독재를 위한 권력 재편과 동전의 양면으로서 전개되었음.
- 이러한 권력 재편은 개별 기관들 사이의 세력 및 특권의 관계를 재편하는 과정이었을 뿐 아니라, 주요한 엘리트 개인들 간의 권세 및 특권을 재편하는 것이었음.
- 따라서 이러한 재편 과정은 몰락하는 기관, 집단, 개인들이 한편에 존재하고 다른 편에서 득세하는 세력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가운데, 저항하는 세력들을 무력화, 숙청, 제거하는 과정과 득세하는 세력을 결속 공고화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음.

□ 핵·미사일 능력 증강을 중추로 한 대내외 강경노선의 추진

- 북한은 2009년부터 대남·대외 강경노선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노선은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도 계승되었고, 한층 체계적으로 또한 효과적으로 진행되었음.
- 대외 전략 노선의 핵심은 핵·미사일 능력 증강이었는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2013년 3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으로 구체화되었음.
- 이 노선은 사실상 ‘핵·미사일 능력 증강’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다른 목표를 이에 종속화 시킨다는 것을 의미했음.
- 또한 이러한 노선의 채택과 추구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갈등과 마찰을 확대하고, 북한이 이에 강경 대응하는 가운데 한반도 군사/외교 위기를 야기하는 것이 불가피한 노선이었음.

- 김정은 정권의 대내정책 노선의 핵심은 위에서 거론한 대외 강경/갈등 노선이 구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비용과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었음.
- 핵·미사일 증강 노선 및 대남 강경 노선은 불가피하게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야기했는데, 김정은 정권의 대내 경제노선은 이러한 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했음.
- 또한 김정은 정권의 대내 정치 노선도 대외 강경정책이 불가피하게 야기하는 여러 부작용을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데 치중해야 했는데, 북한의 대외 강경 노선은 내부적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켜서 내부 불만 잠재력을 상승시키며, 대외 교류협력 증가 및 내부 시장 활동 증대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치적 의심과 우려를 증가시키게 됨.
- 여기에다가 앞서 언급한 김정은식 새로운 수령독재 체제 구성과정에서 기관 체계 및 엘리트 개편이 야기하는 내부 잠재 불만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첨가되었음.
- 이를 배경으로 김정은 정권의 대내정책은 전반적으로 강경 기조를 띠게 되었음.

3) 김정은 정권의 국정체계 재편 진행 과정

- 김정은 집권 이후 엘리트 재편은 크게 두 번에 걸쳐 일어났음.
- 첫 번째 재편은 2012~2013년 사이에 있었으며, 두 번째 변화의 파고는 2019~2021년 사이에 발생함.

□ 2012~2013년간 국정체계 개편의 주요 특징

- 이 시기 개편의 특징은 세 가지임. ① 김정일이 결성해준 후계자 옹위 그룹의 해체, ② 선군 원칙 대신에 선당 원칙 관철, ③ 공안기관 우선 체계 수립
- ①과 관련한 핵심 변화는 리영호 총참모장 해임을 통해 김정은식 권력 재편에 대한 군부 저항의 벽을 허문 것, 그리고 장성택과 행정부를 제거함으로써 노선 투쟁을 정리하고 독자 노선 파벌이 공고화되는 싹을 없앴 것임.

- ②와 관련한 변화는 비군인 출신을 총정치국장과 인민무력부장에 임명하고, 총정치국을 앞세워 선군 시대에 결성된 군부 기관별 이기주의, 외화벌이 관련 부패와 도당을 혁파하고, 군부를 당적으로 통제하면서 핵·미사일을 중심으로 새롭고 보다 공세적인 군사태세로 재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
 - 최룡해는 2012~2014년 기간 선군 군부의 예봉을 꺾는 데 공을 세웠고, 그 후, 총정치국 부국장 출신 박영식이 인민무력상으로서 2015~2017년 사이에 재임했고, 최룡해 후임으로 2014년 4월 황병서가 총정치국장에 임명되었음.
 - 두 인물은 군대를 선당 원칙에 따라 재조직하여 정착시키는 데 주요 역할을 했음.
- ③ 공간기관 우선 체계의 수립과 관련한 변화는 다음과 같음.
 - 2012년 이래 김원홍과 국가안전보위부가 타 부서를 압도하는 권세를 누리는 양상이 등장했고, 인민보안부와 총정치국, 조직지도부 같은 공안 관련 부서의 경우는 책임자가 거의 바뀌지 않았음.
 - 전체적으로 볼 때, 2012~2013년에 수립된 인물·기관 체계가 대략 2017년까지 지속되었는데,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 위원·후보위원과 관련해서 상당한 폭의 교체가 있었으나, 실제로 주요 핵심 실무 직책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었음.
 - 이 시기 또 한 가지 특징은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까지 당시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원홍·황병서, 그리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조연준과 김경옥이 퇴임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아울러 2019년 4월에는 조직지도부장이었던 최룡해가 명예직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이직했고, 경찰총국장과 통전부장을 역임하던 김영철도 2018년 장금철 통전부장으로 교체되었음(이후 그는 2021년 다시 통전부장으로 부활했음).

□ 2019~2021년간 국정체계 개편의 주요 특징

- 2019~2021년 사이의 변화는 기존 국정노선과 체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정책과제와

목표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은 2019년 2월 미·북 간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미국과 대결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을 예견하는 가운데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내적인 힘을 증대하는 데 주력하는 노선을 채택
- 북한은 2021년 초 8차 당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국방력 강화’ 노선을 내세우면서, 매우 야심찬 핵·미사일 현대화, 재래무력의 선택적 현대화 그리고 ‘전민항전준비 완성’을 추진할 것을 선언했다는 점임.
- 북한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실패 이후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국가의 경제장악을 더욱 강조했으며,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정책 채택을 통해 대남 차폐/차단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음.
- 이러한 정책 노선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문제 대두 이후로 강화되고 있음.

○ 권력 개편 측면을 보면, 무엇보다 주요 공안 직책 담당자의 변화가 두드러짐.

- 2018년 김수길이 총정치국장이 되었고, 정경택이 국가보위상으로 취임
- 인민보안부장 최부일이 2019년 교체되고, 2019년부터 리만건·김재룡으로 이어지는 핵·군수공업 계열의 조직지도부장이 임명되었으며, 조직지도부 내에서는 2020년부터 김여정·조용원·김조국·리만건 4인 체제가 진행됨.
-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실패에도 불구하고 2021년 김영철은 통전부장으로 재기했는데, 2021년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김정은 초기의 고위직 인물 중에서 김영철이 유일하게 여전히 동급의 고위직을 유지하고 있음.

○ 2012~2013년에 인물·기관 재편이 〈집권체계의 재편 + (새로운 국정노선에 부합한) 재정향〉이라는 이중의 목적을 추구했다면, 2019~2021년의 재편은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 ‘전략국가’가 지향하는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국정의 노선과 체제를 정비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음.

- ‘새로운 길’이라는 표어에 집약된 새로운 국정의 노선과 체제는 미국과의 대결이 장기화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자력갱생과 과학기술발전을 토대로 내적인 힘을 기르는 데

집중하며, 특히 핵·미사일 능력의 추가 발전 및 재래식 군비의 선택적 현대화를 토대로 ‘국방력 강화’를 통해 미국을 ‘제압’하는 물적 능력과 작전적 행동 능력을 겸비한다는 것, 그리고 비·반사회주의를 통해 내부안정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추구함.

-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도와 기관·인물의 체계가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의 시정연설과 권력 개편에서부터 발전되기 시작했고 2019년 12월 7기 5차 당 중앙전원회의를 거쳐 8차 당대회에서 일단 정식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새로운 길’에서 핵심 목표는 핵·미사일 능력의 추가 발전과 재래식 군비의 선택적 현대화인데, 이 목표 실현에 부합하게 국정 체제가 정비된 것이 2019~2021년 재정비의 핵심 특징이라 할 수 있음.

2. 2022년도 전망

□ 북한이 밝힌 2022년도 국정 방향

- 북한의 대내외 정책과 국정체계는 2019년 2월 미·북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새로운 길’로서의 일관된 노선의 실현을 중추로 하고 있는데, 제8기 제4차 당중앙위 전원회의(2021.12.27.~31.) 보고는 이를 재확인
- 핵심 국정방향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음.
 - 첫째, 미·북 대결이 장기화될 것을 예견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
 - 둘째, 자력갱생 및 국가의 경제장악 강화에 기초한 경제 안정화
 - 셋째, 당조직의 역할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기초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앞세우면서 반/비사회주의 단속을 통해 정권의 대민 통제를 현저히 강화
- 2022년 정책 방향에서 두 가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첫째,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농촌문제 해결’을 별개의 의제로 선정하고 중요하게 다루었음.

- 둘째,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2022.1.19.)는 싱가포르 정상회담(2018.2.) 이후 북한이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하였음을 밝혔는데, 이는 북한이 전략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됨.

□ 2022년도 정치 분야 주목 사항

○ 대내정책에서 경직성이 완화되고 실용성이 증가할 수 있음.

- 2022년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보고는 내부 문제 특히 경제문제에 일방적으로 치중했고, 대외적으로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국방력 강화, 대남·대미 적대시 정책 비난 등의 언급을 최소한으로 자제했고, 이 밖에 이데올로기적 원칙을 덜 강조했음.
- 국가의 경제 장악 그리고 반/비사회주의 투쟁이 여전히 언급되고 있지만, 그 구체성과 언급 빈도가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고, 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정치의 기본방식이라 했던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으며, 민간의 시장활동의 축소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국가 상업망 확대 정책, 그리고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교양의 일반적 강화 정책도 언급되지 않았음.
-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및 내부 경제난 해결과 관련하여 보다 실용적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코로나19 방역의 기본체제는 유지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이슈 등을 포함하여 대외 접촉과 행보에서 보다 실용적 태도를 보일 개연성이 있음.

○ 2022년 북한 대내정책과 국정체계의 기본틀에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외적으로 긴장 강화 요인이 많은 바, 긴장 강화가 실제로 현실화하는 경우, 대내 정책에서의 경직성 증가도 불가피할 것임.

- 4월에는 김정은 당제1비서 취임 10년(4.11.), 김일성 생일 110년(4.15.), 조선인민군 창건 90년(4.25.)이라는 중요 기념일이 몰려 있는데, 김정은 집권 10년 제1의 업적으로 국방력 강화를 선전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 동안 이와 관련한 행동이 있을 수 있음.

- 3월 한국 대선결과, 한미연합훈련 진행 상황을 고려하며, 4월 대내 정치적, 군사 기술적, 외교안보적 필요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이 정치군사적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3월 한국의 대선 이후 추진될 대북정책의 변화에 북한이 반응할 수 있음.
- 하반기 주목할 북한 내외 행사는 정권수립일(9.9.), 북일평양선언 20년(9.17.), 노동당 설립일(10.10.),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7.4.), 8월 한미연합훈련, 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9.10.~9.25.),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9~11월 중 예상), 미국 중간선거(11.8.) 등이 있음.

III 외교

김진하

1. 10년 평가

1) 대립국면기(2012~2017년) 북한 대외정책 평가

□ 전략목표

- 2017년 12월까지 대립국면 기간 중 북한이 추구한 대외정책의 핵심 목표는 핵무력완성이었으며, 국제경제제재의 가중과 외교적 포위를 무릅쓰고 병진노선을 고수하며 국가핵무력 완성이라는 전략목표를 신속히 달성하는 데 성공하여 2017년에는 핵무력완성을 선언
- 이 기간 총 4차례의 핵실험과 연이은 중장거리 운반수단(ICBM 및 SLBM 등 포함) 발사실험을 거치며 2018년경에는 30~60개의 사용가능 탄두와 각종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확보
- 당초 목표했던 자주권 확립을 향한 핵 억제력 확보를 넘어서는 확증보복 능력까지 획득하게 된 것으로 추정

□ 핵능력 증대의 전략적 함의

- 첫째, 북한의 안보 확보: 핵탄두 및 운반체계의 다량생산 및 보유로 북한은 핵무력의 생존성을 확대시켜 2차 타격능력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북한 핵억제력의 급격한 증대에 반비례하여 미국의 군사적인 비핵화 압박전술의 실효성이 사실상 급감했음을 의미
- 둘째, 대남·대미 압박능력 확대: 핵무기 소형화 및 다종화 진전을 바탕으로 핵무력 실전동원 및 학전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핵 보복 및 공갈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제고시켜 미국과 한국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강압외교와 위기고조전략을 구사할 능력을 구비하게 됨.

- 셋째, 동북아 국제 질서 훼손: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시권 내 진입하면서 장거리 투사능력이 확대되어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동북아 역내 동맹국들과 주요 미군기지의 안보를 사실상 인질화하여 전후 미국 중심으로 유지되어오던 국제질서의 간간을 훼손하는 것
- 넷째, 내적 안정성 고양: 핵무장 달성을 김정은의 세습 정통성 확보와 체제결속 및 강력한 지도자로서 김정은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했으며, 대내적 체제결집과 엘리트 통합에도 유용하게 사용
- 다섯째, 전략적 유연성 증대: 트럼프 정부의 군사적 위협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북한이 <강-대-강> 대치에 나설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바로 증강된 핵능력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며, 이후 전개된 유화전술로의 태세전환도 증강된 핵무력을 배경으로 한 것

□ 핵무력 완성의 대가

- 국가핵무력완성이라는 전략목표 달성은 비싼 대가, 즉 더욱 강력해진 경제제재를 초래
- 경제제재의 압박은 강력한 것으로, 경제제재는 포괄적이면서 정교한 맞춤형 제재로 진화되어 갔으며, 특히 2016년 이후의 유엔제재는 제재 대상 품목과 기업, 그리고 인물을 더욱 세분화, 구체화하며 경제적 고통을 배가하는 것이어서, 체제수호를 위한 핵무장이 도리어 체제안정성을 위협하는 역설적 상황이 도래
- 강화된 대북제재는 비생산적인 핵무장프로그램 완성에 국가 자원을 집중투입하게 되면서 악화된 국가경제와 더불어 체제 내구력 유지 및 정권 생존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기 시작

2) 협상국면기(2018~2021년) 북한 대외정책 평가

□ 전략목표

- 협상국면 기간 중 김정은 정권은 ① 한반도 현상 변경 및 핵무장 기정사실화, ② 경제제재 해제를 필두로 한 대북 국제포위망 돌파, 그리고 ③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미국과 대등한 전략적 지위 확보 등의 전략적 목표를 유화·협상전술로 추구

□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

- 싱가포르회담으로 북한은 첫 번째와 세 번째 목표 성취 면에서 진일보한 성과를 추수
-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및 평화체제 수립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며, 협상을 통한 한반도 현상 변경과 비핵화회담의 핵군축회담으로의 전이를 통한 핵무장 기정사실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제재 해제 및 대북포위망 해체라는 두 번째 목표달성도 가시권에 두게 되었음.
- 특히 세 번째 전략목표 추진 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정상회담을 통해 대립국면 기간 중 고립에 빠져 있던 김정은은 미국 대통령과 마주한 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국제무대에서의 주연으로 등장하면서, 선대 수령 김일성과 김정일도 이루지 못한 위업을 달성한 셈.
- 이는 내부정치 면에서 권력계승의 정통성을 두텁게 쌓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정책 목표로 추진되었던 전략국가로서의 지위 획득도 외형적 실체를 가지게 되었는데 미·북 정상회담의 성사가 시진핑·김정은 정상회담 개최를 불러오면서, 소원해졌던 중국과의 관계도 정상궤도로 재진입하는 토대까지 마련

□ 하노이 노딜의 원인

- 협상정체를 가져온 하노이 노딜(No Deal) 사태는 북한의 전략목표 달성이 실제로는 요원한 일이었다는 점을 표출

- **전술적인 실책:** 미·북 양측 모두 전술적인 면, 즉 협상전술과 방식에서 실수를 연발하며 상호 오해와 불신을 불러온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음.
 - 특히 양측 모두 정상 간 극적 빅딜 타결이라는 희망적 기대에 매몰되어, 실무진 차원에서의 조율과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상대방의 진의도 제대로 파악치 못한 채, 정상회담을 열었고 결렬을 자초
- **근본적 불일치:** 하노이회담 결렬의 근본적 문제는 비핵화 및 핵사찰에 대한 정의와 수준, 그리고 제재해제의 범위와 순차 등에서 미·북 간에 현저한 시각차가 존재했다는 점이며, 핵심적으로 북한은 제재해제와 완전 비핵화를 등가로 교환할 의사가 없는 반면, 미국은 등가 교환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에서 근본적 인식 불일치를 노출시킴.
 - 북한에 있어 비핵화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제공 해제 등을 포함한 ‘조선반도 비핵화’를 의미하며, 비핵화 협상은 실질적으로 상호적, 단계적, 부분적인 비핵화, 즉 핵동결이나 핵군축 협상을 의미하였는데,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암묵적으로 이미 수용한 상태이거나 최소한 협상을 통해 이에 동의하게 유도할 수 있다고 오판했던 것으로 사료됨.
 - 북한이 단지 낙후한 영변 핵시설 등에 대한 사찰, 검증, 폐기 등을 대가로 대북제재의 실질적 해제를 요구하게 된 배경으로, 이는 부분적 비핵화(실질적 군축 또는 군비통제)로 사실상 전면적인 제재해제를 요구한 셈.
- 결론적으로 경제제재 해제 및 대규모 경제 지원이라는 패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했던 트럼프 정부와 부분적 양보로 대북제재 핵심부분 해제를 기했던 김정은 정권 간에는 타협하기 힘든 결정적 시각차가 존재했던 것

□ 하노이 이후

- 불발로 끝난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는 북한이 <핵무장 기정사실화 및 한반도 현상 변경>과 <제재해제 및 국제포위망 돌파>라는 전략목표들 중 전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협상에 임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줌.

-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 자력갱생 버티기로 제재에 맞서나가며 핵무력 고도화에 나서겠다며,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경고장을 들이민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북한이 협상 목표치를 조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협상 진입 고도를 높이면서 미국의 양보를 강압하는 형국
- 바이든 정부 역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라는 미국의 전통적 대북정책 목표를 견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하노이에서 표출된 미·북 간 이견이 단기간에 해소될 개연성은 그리 높지 않음.

□ 북한의 배수진과 ‘기다리며 지켜보기’

- 북한은 2021년 연초부터 8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자력갱생 버티기로 제재에 맞서나가며 핵무력의 다종화·고도화에 나서겠다며,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속된 미·북 간 북핵협상 정체국면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출
- 북한이 미·북 간 협상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배수진을 치며 버티기와 대미강압에 나서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하며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먼저 양보하며 선뜻 협상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 전개
- 2021년 내내 미·북 간 ‘기다리며 지켜보기(Wait and See),’ 즉 사실상의 ‘전략적 인내’ 상황이 재개·지속된 이유

□ 정체돌파를 위한 북한의 조정된 도발

- 2021년 미·북 힘겨루기 및 협상 정체 국면이 장기화되자 북한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 및 단거리탄도미사일 열차 발사, 그리고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실험 등 전술 도발을 반복 감행

- 동북아 질서 안정과 미국의 역내 영향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드러내며 2022년 초 현재까지 전술적으로 대미압박의 수위를 고조시키는 중
- 동시에 북한은 북·중 수교 72주년 및 중국의 한국전 참전 71주년 등 이벤트를 활용하여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하면서 중국과 대립 중인 미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한편, 외교 고립과 경제제재의 압력을 중화하려는 대응책 구사

2. 2022년도 전망

□ 주요 요인

○ 미·중 경쟁

- 2022년도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특히 대미 및 대중국 정책의 향방은 향후 전개될 미·중 대립의 전개 양상에 따라 좌우될 것

○ 기타 요인

- 북한 경제재정난 심화, COVID-19 팬데믹 사태의 전개, 김정은 건강상태, 한국 및 미국의 차기 정권의 성향 등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북한 외교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구조적 요인으로서 미·중 경쟁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전제조건

- 2022년에 극적으로 미·중 경쟁이 해소되어 양국 간 협력체제가 재건되거나 미·중 탈동조화 및 대립이 더욱 격화되어 진영대결 구도, 즉 신(新)냉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극단적 시나리오가 전개되지 않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설정

- 즉, 양강이 전면적 대결이나 전략대립을 회피하는 신중한 행마를 취하는 보합세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가정하에 2022년 북한의 대외정책을 전망

□ 미·북 간 줄다리기와 지켜보기

-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 출발선을 선점하기 위한 미·북 간 줄다리기와 지켜보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억제 및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제재국면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협상목표 하향조정과 협상장 복귀를 인내심 있게 추진해 갈 것
- 반면 북한은 자력갱생 전민항전체제로 경제제재를 버텨내며 핵무력 고도화에 진력하는 동시에, 주변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수준의 세심하게 수위가 조정된 전술 도발을 통해 역내 긴장을 조성하면서 미국의 양보를 강압해나가는 데 집중할 것

□ 북한의 조정된 긴장고조 전술

- 전술무기체계 실험으로 미국의 역내 동맹국들과 기지들을 핵인질화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거듭 증명하고자 할 것이나, 단기간 내 ICBM 발사 실험 또는 탄두대기권 재진입 실험 강행 등 싱가포르회담에서 합의된 미·북 협상의 기본골격을 총체적으로 허물 수 있는 도발을 쉽사리 감행할 수는 없을 것
- 협상을 통한 한반도 현상 변경과 핵무장 기정사실화라는 전략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확신이 굳어지거나, 미·중 대결 심화로 대미정책 기초의 전반적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고 믿게 되면 전략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점에서 최근 1월 19일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에 참석한 김정은의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 재가동 위협 발언은 매우 시사적

□ 등거리외교 가능성

- 미·북 협상국면 재개 시 북한은 미·북 비핵화협상이 유리한 협상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을 압박해나갈 자산으로 중국 카드를 사용한 등거리외교 구사 가능성도 상존
- 미·중 대립이 심화될수록 동아시아 유일 동맹국인 북한의 전략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중국의 입장을 적극 활용하려 할 듯
- 최근 보다 긴밀해진 북·중 대미공조 움직임은 중국의 지원으로 심화되는 경제위기를 완화시키면서 미국의 양보를 압박하고자하는 북한의 의도가 반영된 것

IV 경제

홍제환

1. 10년 평가

-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를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
 - 경제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지향하는 경제정책 방향과 경제운용 기조 전반에 대해 이해
 - 대외무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는 북한의 산업 생산 및 소비 동향 파악, 그리고 제재의 영향에 대한 평가 가능
 - 주민생활 수준을 살펴보는 것은 김정은 시대 경제운용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내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1) 한층 진일보한 경제정책의 추진과 실패

- 경제관리방법 개선 추진
 - 김정은 정권은 국영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각종 투자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국영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관리방법 개선 추진
 - 국영산업 투자 과정에서 전통 산업의 재건과 함께 신기술 도입, 산업 현대화도 함께 추진한 점이 주목됨.
 - 국영경제 개혁도 과거에 비해 훨씬 체계적, 지속적이었고, 분권화와 시장화를 더 폭넓게 수용했다는 점이 특징적

- 이러한 점에서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은 과거에 비해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 가능
- 김정은 정권 전반기인 2012~2016년에 북한의 경제 사정이 눈에 띄게 개선된 데에 경제정책이 기여한 바는 뚜렷하지 않지만, 정책이 지속되었다면 머잖아 더 좋은 성과로 이어졌을 것으로 판단

□ 전통적 정책으로의 선회

- 제재 강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고립 속에서 5개년 전략(2016~2020년)이 실패로 돌아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북한은 전통적 정책을 더 철저히 적용하는 쪽으로 선회
 - 자립경제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정권과 체제 안보를 중시하는 북한 입장에서 이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으나, 경제발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또한 분권화와 시장화를 지향했던 경제관리방법 개혁은 퇴조하고, 대신 중앙집권적 통제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 추진한 경제정책은 나름의 합리성과 진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고립에 직면하여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 결과 김정은 집권 전반기 5년의 경제성장은 후반기 5년의 침체·위축으로 반전
 -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이 추세를 다시 역전시키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2)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분수령이 된 대북제재

□ 제재 강화 이전 시기(2012~2016년) 대외무역 확대

- 제재 강화 이전까지 북한의 수출입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는 북한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
- 다만, 수출의 경우 양적으로 증가하여 산업 생산 증대에 도움이 되긴 했지만, 1차 산품 및 저위기술 산업 중심의 수출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질적 측면에서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 가능

- 수입의 경우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 모두 수입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산업 생산 증대, 소비 수준 향상, 시장화 촉진 등에 기여

□ 제재 강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무역 급감과 충격

- 제재 강화 이후 수출입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는 2017년 이후 북한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드는 주요 요인이 됨.
 -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이 금지됨에 따라 수출은 90% 가깝게 감소
 - 자본재 수입은 급감한 반면, 제재 대상이 아닌 중간재 및 소비재 수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수입 감소폭은 수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음.
 - 수출입 감소는 산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생산 위축 수준이 예상만큼 심각하지 않았으며, 소비의 경우 소비재 수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제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음.
- 제재 강화 이후 북한이 심각한 경제위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재 자체의 한계 때문이라기보다는 북한 당국의 정책적 선택에 따른 결과로 판단
 -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재가 북한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 다만 북한 당국이 수입에 대해 통제를 가하지 않아 중간재 및 소비재 수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경제 상황의 빠른 악화를 막는 데에 기여
 - 하지만 무역적자가 급증하여 외화보유고가 빠르게 감소하는 문제 발생
 - 북한의 외화보유 규모가 넉넉지 않다는 점에서 이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나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보기 어려우며, 외화 고갈 시 북한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봉쇄 조치 이후 상황 더욱 악화
 - 수출은 더욱 줄어들었으며, 수입의 경우, 자본재뿐만 아니라 중간재 및 소비재 수입도 급감

- 그 결과 생산 및 소비 부문의 타격이 불가피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 심화

□ 경제안정과 외화보유고 확보 사이의 딜레마

- 현 수준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국경봉쇄가 풀린다고 해도 북한은 경제안정과 외화보유고 확보 사이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
- 자립경제 실현이 하나의 해결 방안일 수 있지만, 북한의 경제 규모, 자원,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이 안정적으로 자립경제를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제재하에서 자립경제 실현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북한 당국의 노력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3) 제재 강화 이후 악화된 주민 생활수준

□ 김정은 집권 초기 향상된 생활수준

- 제재 강화 이전까지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은 한국은행이 추계하는 1인당 소득수준보다 더 큰 폭으로 개선되었을 것으로 판단
 - 2010년대 들어와 북한의 식량 공급 규모 다소 증대
 - 곡물 중 쌀의 비중 상승, 고기류 공급 규모 확대, 기호식품 위주의 음식료품 수입 증가 등을 놓고 볼 때, 식생활의 질적 수준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판단
 - TV·세탁기 등 내구소비재 수입 증가, 전기 이용률 상승, 주택 건설 및 개·보수 활성화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 등도 생활수준 향상 시사
- 생활수준 향상은 시장화와 사경제의 발전, 국영경제의 재건과 개혁,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등에 힘입어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가 성장한 결과

□ 제재 강화 및 국경봉쇄 조치 이후 북한 주민 생활수준 다시 하락

- 제재로 인해 내구소비재, 전기 관련 설비 및 가정용 발전장비, 건축용 자재 등의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은 생활수준 정체 내지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식생활 측면에서는 주식인 곡물 생산량이 제재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으며, 음식료품의 수입은 제재 강화 이후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 제재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
 - 식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제재 강화보다는 국경봉쇄로, 북한의 음식료품 수입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결과, 식량 공급 규모가 감소했으며, 식생활의 질적 수준도 악화하고 있는 상황
- 제재 강화 이후 북한 당국이 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 및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시장화, 국영경제 개혁이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민의 생활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추측

4) 김정은 시대 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 대북제재 강화가 전환점

-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는 제재 강화 시점을 경계로 5년의 성장기(2012~2016년)와 5년의 침체기(2017~2021년)로 구분 가능
- 제재 강화 이전 성장기 동안 북한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도 향상
 - 성장기 동안 북한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대외무역의 확대, 시장화의 진전, 국영경제 개혁 등이 이루어진 결과

- 하지만 제재가 강화된 2017년 이후 북한경제는 침체기로 접어들었으며,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악화
 - 침체기는 대북제재 강화에 따른 대외무역의 위축과 함께 찾아왔으며, 경제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경제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
-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이와 같은 전개 양상은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의 흐름을 뒤바꿔 놓은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보여줌.
 - 제재의 영향이 예상보다 적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북한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효과를 나타낸 결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북한 당국의 대응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따라서 제재가 지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북한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생활수준 악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통제와 관리의 강화 움직임

- 나름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펴던 북한이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경제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 필요
- 그 결과 국영경제 개혁이 후퇴하고 시장 부문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 회복이 저해되는 결과 초래
- 그럼에도 북한 당국이 이러한 정책을 펴는 이유
 - 북한 당국이 경제 악화를 정권에 대한 정치적 위협으로 인식하여 정치적·이념적 경직성을 심화
 - 시장화 및 국영경제 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을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
 -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영 부문에 노동과 자원을 집중시킬 필요성

2. 2022년도 전망

□ 2022년 북한경제의 회복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무역 재개 수준

○ 대북제재가 단기간 내에 해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에서, 국경봉쇄의 완화 수준 및 그에 따른 북·중무역의 회복 정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었으나,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부담을 갖고 있으며, 제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유 외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중무역 규모가 국경봉쇄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
- 식료품, 비료, 의약품 등 필수 품목 중심으로 중간재 및 소비재 수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으로 예상

○ 이처럼 북·중무역이 부분적으로 재개될 경우, 경제회복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으나, 경제상황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

□ 자력갱생 및 국가의 통제·관리 강화라는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될 전망

○ 이번 전원회의에서 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관리를 강조하는 측면이 한층 약화됨.

○ 그러나 제재와 국경봉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산업 생산 증대의 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2022년에도 자력갱생과 함께 국가의 통제 및 관리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 전술했듯이, 김정은 정권은 경제 여건이 나빠질수록 경제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기조를 보여옴.
- 북한은 2021년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5개년계획의 2차 연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식량 사정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

- 농촌진흥청은 기상이 양호했고, 태풍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2021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이 2020년에 비해 29만 톤(7%) 증가한 46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²⁾
 - 이번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농업 부문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자신심을 가지게 하는 뚜렷한 진일보가 이룩”되었다고 자평한 것도 이러한 추정 결과에 부합
- 게다가 북·중무역 재개 움직임으로 보아, 음식료품 수입 규모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2022년 북한의 식량 사정은 전년에 비해서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그렇다고 해도 식량 부족 상황은 지속될 것

□ 식량 증산에 많은 역량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

- 이번 전원회의에서 농업 생산 및 농촌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데에 집중³⁾
 - 농업 생산과 관련해서는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나라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농촌발전전략의 기본과업으로 규정하고 향후 10년간 달성할 알곡 생산목표, 축산물·과일·남새(채소)·공예작물·잠업 생산목표 제시
 - 그러나 농촌발전전략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는 불분명하며, 생산 활동을 촉진할 추가적인 유인체계도 마련되지 않음.
- 밀농사 확대를 위한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 있음.
 - 2021년 9월 김 총비서의 시정연설에 이어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나라의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벼와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하여 “인민의 식생활 문화를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며 밀 생산 강조

2) “올해 북한 식량작물 469만 톤 생산, 전년 대비 29만 톤 증가,”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21.12.16.

3) 농촌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항은 V장에서 검토함.

- 생활수준 향상 속에 주민들의 식생활은 변화되고 있지만, 밀가루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 고려

○ 생산 촉진을 위해 협동농장 부채를 탕감하는 특혜조치 실시

- 북한의 협동농장은 영농물자 조달 과정에서 국가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매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에 대해 많은 부채를 지고 있음.
- 따라서 부채 해소는 농장의 재정 상황 개선, 농민의 사기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움.
- 또 수매량 감축 등 농장 부채 감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포퓰리즘적인 일회성 정책을 펴는 데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보임.

V 사회

정은미

1. 10년 평가

1)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정당성 확보 노력

□ ‘포섭적’ 사회복지 정책 전개

- 집권 초기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하는 선민(先民)노선 공표와 함께 ‘포섭적’ 사회복지 정책 전개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당성 기반 구축
 - 식량 배급 및 살림집 보장과 같은 사회보장성 인민시책의 보편적 공급 원칙이 후퇴하고 대신 체제 충성 집단 우선의 ‘선별적’ 공급 정책 추진
 - 특히,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건설 등 과학자, 기술자, 교원 및 지식인 포섭을 위한 ‘살림집 정치’ 적극 전개
- 정권 초기 3년(2012~2014년) 동안 국가예산 중 인민적 시책비와 사회문화 시책비 비중이 10년 중 가장 높았음.
 - 2012~2020년 동안 국가예산 중 인민적 시책비와 사회문화 시책비의 평균 비중은 37%이나 집권 초기 3년(2012년 38.9%, 2013년 38.8%, 2014년 37.2%)은 전체 평균 비중을 추월
 - 정권 안정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집권 초기 사회정책에 대한 국가예산 지출 증대

〈표 V-1〉 김정은 정권은 정권의 국가예산 중 인민적 시책비 & 사회문화 시책비 비중 추이⁴⁾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비율(%)	38.9	38.8	37.2	36.6	35.7	36.3	36.4	36.3	36.5	37.0

출처: 『로동신문』에 보도된 최고인민회의 연도별 국가예산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 대북제재 강화 및 코로나19로 동력 약화

- 교육과 보건 부문의 정상화 및 질적 개선에 집중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정당성 복원을 위해 노력했으나 대북제재 강화 및 코로나19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동력 약화
 - 보건(무상치료)과 교육(무료교육)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정당화하는 북한의 핵심적 사회정책 영역이자 인구 및 사회 재생산과 밀접한 영역
- 국가재정 악화 및 선대정권의 ‘선군노선’ 기조, 시장화 등으로 인해 보건과 교육 부문의 공공성 및 보편성이 크게 후퇴, 결과적으로 사회불평등이 가속화
 - 김정은 정권 출범과 함께 채택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도입 및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구현을 위해 교육 부문 개선을 위한 국가예산 지출 증가
 -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보건 부문의 종합적 개선 지침 채택 후 보건 부문 국가예산 지출이 크게 상승, 예산지출 비중이 2014년 6.4%에서 2017년 7.0%로 증가⁵⁾
 - ‘핵보유국’ 선언으로 대북제재가 강화된 2018년 이후 대외경제환경 악화로 사회복지 부문 국가예산 지출 증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가 더해져 사회복지 영역 국가수행 역량 더욱 약화

4) 노동신문의 국가예산 관련 보도를 보면 인민적 시책비 지출 항목에는 교육, 보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부문이 포함되고, 사회문화 시책비 지출 항목에는 체육과 문학예술 부문이 포함되어 있음.

5) 보건 부문에 대한 정부예산 지출의 비중에 대한 통계 수치는 북한 당국이 2021년 6월에 유엔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를 통해 밝혀짐.

〈표 V-2〉 김정은 정권의 사회복지 중 부문별 국가예산 지출계획 증가율(%) 추이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교육	9.2	6.8	5.6	6.3	8.1	9.1	5.9	5.5	5.1	3.5
보건	8.9	5.4	2.2	4.1	3.8	13.3	6.0	5.8	7.4	2.5
사회보험· 사회보장	7.0	3.7	1.4							

출처: 『로동신문』에 보도된 최고인민회의 연도별 국가예산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2) 사회정책의 공공성 약화

□ 복지재정의 국가부담 축소

- 국가부담의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의 실효성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경제력에 기반한 보장성 보험 상품 가입 독려
 - 국가예산 지출계획에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부문의 증가율은 2012년 7.0%, 2013년 3.7%, 2014년 1.4%로 크게 하락한 후 2015년부터는 공식발표에서 제외
 - 2015년 4월 ‘보험법’ 개정 후 국가사회보험 대신 개인의 보험회사 보험상품 가입을 독려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 변화 진행
 - 부양자보험은 부양자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의 소득상실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유족연금 성격의 보험으로, 과거 국가부양책임의 복지재정 일부를 개인 또는 가족으로 전가하는 것

□ 복지서비스의 ‘탈국가-상품화’

- 사교육 증대, 개인진료 및 개인약국 성행, 정휴양 시설의 유료화 등 복지서비스의 ‘탈국가-상품화’ 진행으로 공공성 후퇴
 - 복지의 국가공급체계 붕괴 이후 복지의 탈국가화는 비공식 경제활동의 증대로 기존 복지공급 단위인 직장에서 배제되는 형태와 복지상품 자체가 시장을 통해 공급되는 형태가 동시에 진행

- 복지의 ‘탈국가-상품화’ 현상의 장기간 누적은 사회정책의 공공성 약화로 인해 개인 및 가구 (household)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복지의 불평등을 초래

3) 사회통제 강화와 반작용

□ 정풍운동 및 사회통제 전개

-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명분으로 부정부패 근절 및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 척결을 위한 전 당, 전 국가, 전 사회적 차원의 정풍운동 및 사회통제 전개
 - 대중적 정치지지 기반을 위한 ‘애민정치’는 권력층의 활동을 강제하고 인민을 포용하는 전략으로 간부의 헌신과 희생정신 독려 및 대민사업 지원 강화 촉구
 - 정풍운동 및 대중규율 강화는 궁극적으로 체제 내구력 향상을 목적으로 지향
- 2019년 하노이 회담 실패 후 자력갱생 노선으로의 전환과 함께 사회통제가 전면화되었고, 2020년 코로나19 비상방역으로 인해 사회통제 지속의 정당성 강화
- 외래 사상 문화의 유입과 영향으로 인한 체제이완 및 체제이탈에 선제적으로 대응,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통제 강화

□ 사회통제의 실효성 약화

- ‘뇌물’ 생존메커니즘의 공고화, 주민의 생계형 저항, 시장 중심의 자생력 등으로 사회통제의 실효성 약화
 - 조직생활, 지원사업, 세외부담, 노력동원, 단속과 처벌 등에서 ‘뇌물’을 통한 면책 현상은 간부와 주민 모두의 생존메커니즘과 밀접하게 연계
 - 대북제재의 지속, 반복되는 자연재해, 코로나19 비상방역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국가경제력 약화 및 주민의 시장 밀착형 생존환경은 사회통제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요인들로 작용

4) 지역불평등 의제 대두와 지방발전의 ‘본보기’로서 삼지연시 부상

□ 지역불평등 의제의 대두

- 7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사회주의문명강국’ 건설의 실패와 8차 당대회에서 지역불평등 문제 부상
 -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결정서에 ‘사회주의문명강국’ 건설 목표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8차 당대회에서 목표 미달성 인정
 - 사회주의문명강국이란 “사회주의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 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로 규정
- 국가시책 혜택의 평양 및 특권집단 집중, 지방의 사회정책 역량 약화로 인해 지방인민의 상대적 박탈감 증대 및 복지의 지역불평등 심화
 - 2021년 개최된 8차 당대회에서 평양과 지방 간의 격차,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해결해야 할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지방발전의 ‘본보기’ 삼지연

-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농촌 및 시, 군의 인민 생활의 낙후된 현실을 지적하고, 향후 지방 경제 발전 및 지방인민 생활 향상에 주목할 것을 공표
- 후속 조치로서 지방 및 농촌 새로운 발전모델(‘이상촌’)로서 삼지연시가 본보기로 제시되고 ‘시,군 발전법’을 제정하여 지방 및 농촌 발전의 법적 근거 마련
- 2021년 12월 말에 개최된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 강령’ 채택을 통해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운동을 기반으로 농촌발전을 위한 종합적 청사진 공개
 -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농촌테제’라 할 수 있는 농촌건설강령에서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당의 농촌건설정책이라고 다시 한번 명확히 규정

- 자력갱생노선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기존의 평양 편향의 발전전략에서 탈피해 지방 및 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내부위기’ 조절 모색

2. 2022년도 전망

□ 비상방역사업의 최우선 기조 유지, 단계적 국경개방과 국제보건협력 모색

- 당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론에서 올해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 제1순위”로 지정, 방역 및 보건사업에 집중하는 가운데 단계적 국경개방 진행
 -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의 전 세계 대확산 속에서 비상방역체제의 장기화 대비 국제지원물자 및 의약품·생필품 반입 위주의 국경개방 추진
 - 1월 16일부터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 재개, 방역 안전성 점검과 함께 북·중 간 단계적 국경개방 추진 예상
- 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김정일 생일 80주년 기념 대규모 경축사업 추진이 예정된 가운데 방역의 안전성 확보가 관건
 - 노동신문(1.14.)을 통해 발표된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조직위원회 공보’에서 밝힌 것처럼, 2월부터 4월까지 경축 기간으로 지정
 - 국제 및 국내 차원의 다양한 경축 행사들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보건협력에 호응할 가능성 존재

□ 국가적 시혜 늘리고 민생부문의 사회통제 일시적 완화

-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강도 높은 노력동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활고 가중에 따른 민심 이반을 의식하여 국가적 경축을 명분으로 국가적 시책의 혜택을 늘리고 사회통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전망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1.13.)을 통해 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김정일 생일 80주년을 앞두고 대사면(大赦免)을 발표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정당성 획득과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과 체제결속 고취

- 아동 및 연로자 등 취약계층과 교육 및 보건 부문 관련 국가부담의 시책 혜택을 늘림으로써 ‘어버이 수령’의 배려를 강조하는 사회정책을 추진할 전망
-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1.19.)의 결정에 따라 향후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로 인한 대외환경의 악화로 5개년계획 수행이 난관에 처할 경우 내부위기 조절 차원에서 민생부문 관련 사회통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

□ 국방정책 전환으로 지방 및 농촌 발전계획 추진 난관 예상

- ‘시,군발전법’ 및 ‘새로운 농촌건설강령’을 기반으로 삼지연시와 검덕지구를 본보기로 한 지방 및 농촌 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투자 증대 시사
 - 농촌의 살림집 개선, 편의봉사시설 및 보건의료 시설 확충, 학교시설 현대화, 농장원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위한 정보화시설(미래원, 과학기술보급실) 확충에 집중
 - 그러나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 결정에 따른 핵무력증강 잠정중단 철회 시 지방경제 발전 및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수행에서 난관 예상

□ 3대혁명운동 적극 전개, 지역별 경쟁적 노력동원 독려

- 내부 예비자원의 총동원과 사회적 쇄신의 추동력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운동 적극 전개
 -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김정은의 서한에서 시, 군 단위 중심으로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적극 전개 촉구
 - 새로운 농촌발전강령에서도 농촌발전전략의 실천방법으로 농촌에서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운동 추진 강조
 - 농업근로자의 사상의식 수준 제고를 위한 사상학습 강화, 농업근로자들의 과학기술 지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인재화’ 추진, 생활문화 환경 개선을 통한 농촌의 문명수준 제고 추진

- 지방 및 농촌 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투자 증대 공표와 별개로 무력도발로 인한 대외환경 악화 및 세계적 보건위기 지속으로 부족한 국가재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규모 노력동원 불가피
 - 도, 시, 군들 사이에 경쟁순위를 평가하는 방식의 지역별 ‘경쟁열풍’ 조장을 통해 지방의 물자 및 노력 동원에 주력
 - 3대혁명운동에서 청년의 선도적 역할 강조,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탄원진출 형태의 청년노력 동원사업을 강화할 것

VI 결론

홍제환

1. 10년 평가

□ 부문별 평가

- 이 연구에서는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부문으로 나누어 김정은 시대 10년을 평가함.
- 정치 부문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권력 안정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김정은식 독자 수령 권력 체계 구축 과정 및 엘리트 재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
 - 김정은식 독자 수령 권력 체계 구축 작업은 선군에서 선당으로의 정권 운영 조직원칙 변경, 기관/인물들 간의 세력 및 이권 관계 재편, 핵·미사일 능력 증강을 중추로 한 대내외 강경노선 추진 등을 통해 전개
 - 김정은 시대 엘리트 재편은 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2012~2013년에는 〈집권체계의 재편 + (새로운 국정노선에 부합한) 재정향〉을 추구했다면, 2019~2021년의 재편은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 ‘전략국가’가 지향하는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국정 노선과 체제 정비를 추구
- 외교 부문은 대외정책 패턴을 북핵 외교와 미·북 관계 전개 양상에 초점을 맞춰 두 시기로 나누어 분석
 - 2017년까지 대립국면 기간 중 북한은 핵무력완성을 통해 안보 확보, 대남·대미 압박능력 확대, 내적 안정성 고양, 전략적 유연성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체제 내구력 유지 및 정권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초래
 - 2018년 이후 협상국면 기간 중 북한은 ① 한반도 현상 변경 및 핵무장 기정사실화, ② 대북 국제포위망 돌파, ③ 미국과 대등한 전략적 지위 확보 등을 추구해 왔으나, 하노이

노딜 이후 미·북 간 북핵협상 정체국면에 접어들어 따라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 경제 부문은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 생활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제재 강화 이전과 이후 대비되는 북한경제의 변화상 분석
 - 분석 결과, 제재 강화 이전 성장기 동안 북한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도 향상되었으나, 제재가 강화된 2017년 이후 북한경제는 침체기로 접어들었으며,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대북제재는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흐름을 뒤바꿔 놓은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 가능
 - 한편, 북한은 한층 진일보한 경제정책을 추진했으나,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경제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
- 마지막으로 사회 부문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변동 및 북한 당국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서 사회복지와 사회통제라는 두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
 -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정당성 기반을 구축하고자 ‘포섭적’ 사회복지 정책을 전개했으나, 대북제재 강화 및 코로나19로 동력 약화
 - 또 복지재정의 국가부담 축소 및 복지서비스의 ‘탈국가-상품화’로 인해 사회정책의 공공성 약화가 나타남.
 - 북한은 부정부패 근절 및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 척결을 위한 정풍운동 및 강력한 사회통제를 전개했으나, ‘뇌물’ 생존메커니즘의 공고화, 주민의 생계형 저항, 시장 중심의 자생력 등으로 인해 사회통제의 실효성은 저하
 - 평양 편향의 발전전략으로 지역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8차 당대회 이후 지방 및 농촌 발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통해 ‘내부위기’ 조절 모색

□ 종합 평가

-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능력 증강’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으며, 대내 정책은 대외 강경/갈등 노선 추진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과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데에 초점
- 대립국면이 심화되기 이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증강을 꺾으면서, 동시에 대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정책 추진
 - 권력 개편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정치권력 안정화를 모색하고, 한층 진일보한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예산지출 확대
- 하지만 대외 강경정책으로 인해 제재가 강화되는 등 어려움이 심화되자 이러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
 - 자력갱생과 과학기술 발전을 토대로 내적인 힘을 기르는 데 집중
 - 핵·미사일 능력의 추가 발전 및 재래식 군비의 선택적 현대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 추진
 - 시장화, 국영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경제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
 - 내부안정을 유지하고자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 척결 시도
 - 이상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인물·기관 재편

2. 2022년도 전망

□ 국정운영의 기본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보고 내용을 놓고 볼 때, 대내정책에서 경직성이 완화되고 실용성이 증가할 가능성 있음.
- 다른 한편으로, 대외적으로 긴장 강화 요인이 많은바, 긴장 강화 요인이 현실화하는 경우, 대내 정책에서 경직성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 미·북 간 줄다리기와 지켜보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국면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협상 목표 하향 조정과 협상장 복귀를 인내심 있게 추진해 갈 것
-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에 진력하는 동시에, 세심하게 수위가 조정된 전술 도발을 통해 역내 긴장을 조성하면서 미국의 양보를 강압해나가는 데 집중할 것
 - 그러나 전략도발 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점에서 최근 김정은의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 재가동 위협 발언은 매우 시사적

□ 북한경제의 회복 수준은 북·중무역의 회복 정도가 결정할 전망

- 북·중무역은 부분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경제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으나, 경제 상황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 자력갱생 및 국가의 통제·관리 강화라는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식량 사정은 지난해보다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

□ 비상방역사업 최우선 기조 유지 속 사회통제 일시적 완화 전망

- 북한은 당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론에서 올해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 제1순위”로 지정
- 3대혁명운동의 적극 전개, 지역별 경쟁을 통한 대중노력동원 확대를 통해 자력갱생 및 5개년계획 수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민심 이반을 의식하여 국가적 시해를 늘리고 사회통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것

□ 지방발전과 농업 증산 및 농촌환경 개선에 노력 집중 예상

○ 삼지연시와 검덕지구를 본보기로 한 지방 및 농촌 발전을 위해 국가적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

○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생산력 제고를 위해 당, 국가, 사회적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10년 평가와 2022년도 전망

KINU Insight 22-01

발 행 일 2022년 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편 집 인 기획조정실 연구관리팀

홈 페이지 <http://www.kinu.or.kr>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 통일연구원, 2022

KINU Insight